

경기시민단체연대회의 5월 운영위 회의 서기록

일시 : 2009년 5월 19일 오후 1시 / 시루봉

참석 :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민예총 경기지회, 전교조 경기지부,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녹색자치경기연대

지역 : 오산, 의왕

위임 : 경기시민사회포럼, 참학 경기지회, 경기의제21, 타 지역 시민단체 월례회의

불참 : 경기경실련, 경기YMCA

0. 각 단체별 보고

경기환경운동연합 - 운하백지화 경기행동 활동을 하고 있음. 이름이 경인아라뱃길로 바꾸었음. 사업설명회라는 식으로 기공식을 했으며, 서울을 국제항구로 만들겠다고 함. 지역의 반대가 있던 없던 진행이 되고 있음. 지역의 반대가 해당지역으로 가면 반대가 없음. 인천은 13년을 싸워왔기에 지쳐있으며,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해관계로 뭉쳐있음. 군포는 시민단체가 별로 없고, 대부분 그린벨트 지역이라 개발에 대한 욕구가 강함. 그 와중에 부천시장같은 경우 부천운하한다고 하고 있고, 시민단체들이 문제제기 하니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으려 했고, 김문수 도지사는 킨텍스 앞까지 배가 오게 해달라고 하기까지 함. 서울시장은 5000명이 타는 유람선을 띄우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운하를 만들고 있음. 문제는 힘이 잘 안모임. 해당지역에 힘이 안모이고, 경기도에서 부천, 고양만 관련이 있기에 힘이 잘 안모임. 여주구민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으나, 행사장소를 옮겼다. 관변단체에서 집회신고를 미리내서 방해했음. 김문수 도지사는 반대하면 안하겠다고 했으나, 목소리만 크고 소수가 반대하면 추진하겠다고 함. 홍수를 막는다는 목적으로 보를 6개 정도 쌓는데, 경부운하할 때 갑문설치한다던 위치와 동일함.

민예총 경기지회 - 특별한 일 없음.

경기여성단체연합 - 안양에 모 고등학교에 실습오신 여대생을 교사가 성추행한 사건 관련해서 활동하고 있음. 참여한 여대생 실습생도 4명이고 선생도 4명인데, 1차 끝나고 집에 가려했더니 실습점수를 안주겠다고 하며, 2차 노래방가서 성추행을 했음. 그 중 선생 3명이 전교조였고, 사건 이후 전교조 탈퇴를 했다고 함. 그 대응에 있어서 유한 상태를 해서 문제가 심각해 짐.

경기여성연대 - 장자연 사건, 내년 선거관련 공천 문제도 있고, 여성부와 관련된 프로젝트 문제도 있고, 개별적으로 힘이 안되고 연대단위 설정이 어려움. 여성단위도 필요하고 경기시민단체연대회의도 필요함. 워크샵이 6월에 1박 2일로 있음.

경기자주여성연대 - 참관

전교조 경기지부 - 결성 20주년 행사가 있음. 내일 도의회에서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가 있고, 가능하면 참석해주기 바람. 도의회 홈페이지에서 방청을 신청해야 함. 안양 성추행관련해서 완전히 확인사살을 당했음. 민주노총 건도 가해자는 조합원인데, 민주노총은 뒤로 빠지고 전교조가

조직적 은폐를 뒤집어 쓴 상태이고, 전 위원장이 제대로 책임을 지지 못함. 3명이 제명이 된 상태에서 못받아 들인다는 입장이고, 양 정파의 싸움이 치열해서 정치적 논리나 정파적 싸움으로 한 행위에 비해서 과도하게 결론이 난 상태이다. 변명의 여지는 없으나 조합원이라고 해서 성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단체교섭으로 학교별로 교사들에게 성평등 교육을 하도록 해서 1년마다 하지만, 경기일보에서 기획기사로 3번에 걸쳐 썼으며, 전교조 죽이기로 간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 지역에서 행사로 하종강 강연을 하는데, 의식성장에 좋은 강의였다고 했음. 교육계뿐만 아니라 운동하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음. 강의내용이 업그레이드 돼서 최근의 것까지 돼서 강연을 잘해줌. 지역에서 강연할 때 참고로 했으면 좋겠음.

<의견>

- 전교조에서 먼저 여성단체 등에 사과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을 듯.
-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외부의 시각을 민감하게 잘 보지 못할 수 있는데, 일들이 생기면 언제든지 조언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음.

경기복지시민연대 - 수원지역 요양시설에서 노인학대 사건이 터져 조사하고 있음. 단체의 계획대로 도정, 도의회 정책팀을 꾸려서 자료 수집해서 김문수 평가 하고 있음. 도의회는 조례 관련해서 정보공개청구하려고하고, 하반기에 도정평가를 할 생각임.

경기민언련 - 지난 주말에 제보들어와서 지역 언론 기자가 다른 기자에게 성폭행적 언사를 내뱉어서 조사가 되고 있고, 수치감을 유발하는 발언을 많이 했음. 지난 12월에 언론약법 추진했고, 3월에 100일 유보해서 이후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를 꾸려 공청회를 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음. 지역공청회 이후 여론조사하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고, 한나라당은 여론조사없이 표결로 가려고 함. 6월 법안가지고 싸움이 있을 것이고, 싸움 준비중. 6월에는 하남지역에서 시민기자학교를 진행할 예정이고, 6월 첫주 금요일부터는 수원방송과 열린 강좌를 시루봉에서 촬영할 예정. 방학 때 쉬고 난 뒤 시민단체들과 논의해서 방송할 계획임.

오산이주노동자센터 - 아직까지는 참관임. 오산민주단체연석회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음. 이후에 정식참가.

녹색자치 경기연대 - 특별한 일 없음.

경기시민사회포럼 - 내일 지바네트워크 현의원 시의원들과 4시부터 토론회 후 교류회를 하니 참석바람.

의왕 - 교육감 선거를 통해 참여하게 되었고, 앞으로 기초 시민단체와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지원 협력하는 센터적인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음.

1. 전차(4월) 회의 보고

2. 활동보고

- OBS 사장에 대해서 이사진 입장은 MB특보가 1500명 중 하나이고 이명박이 모른다고 하고

있음. 노조에서 대의원대회에서 전반적 싸움은 어렵고 유보하기로 하였음.

- 노영호 도의원 관련 기자회견 진행하였음. 한나라당이 자체 진상조사를 하고 100시간의 봉사 활동을 명하였는데, 피해자 동사무소에서 진행하기로 함. 항의 기자회견하고 도의장을 면담했으나, 술먹고 실수한 것이고, 피해자와 합의했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자기들은 다시 다루기 어렵다고 했으며 1시에 안건으로 상정되었다고 함.

3. 논의 안건

(1) 1842개 시민단체 불법·폭력 단체 규정에 대한 공동 대응 건

- 전국시민단체연대회의에서 함께 공동대응하자고 메일이 옴. 논의를 여성단체들이 처음 하는데, 여성부만 가지고 대응할 것인지, 전체 대응할 것인지, 도단위 조직할 건지, 전국단위 조직할 건지 논의해야함. 경기시민단체연대회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논의해보았으면 함.

-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도 서울에 있는 단체들이 중심이 돼서 대응방향이 잡고 힘을 보태는 방식으로 되었으면 함. 그 쪽에서 활동 방향을 잡도록 시민단체연대회의에 공동대응 기조와 계획들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을 듯함.

- 경기도단위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봐주었으면 좋겠음. 창구를 운영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좋을 듯함. 행안부에서 나온 대응안건, 프로젝트를 받았는데, 확인서를 쓰지 않아서 사업비가 지급되지 않은 단체에 대한 대응방안을 확인해주었으면 함.

- 공동대응은 생협들도 거의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보기에 어디까지 불법 단체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음.

- 한시적으로라도 도단위에서 대응을 해야 할 것 같다. 어떤 방식으로 합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해주었으면 좋겠음.

- 500여개 단체에 일괄적으로 자료제출하라는 건 아닌지?

- 확인서에 관한 정보를 준 여성의 전화라는 것이 밝혀진 뒤 감사를 받으라는 이야기를 들음.

- 국회차원에서 감사요청을 했고, 기준을 잡아서 액수가 얼마 이상인 곳은 감사를 한다라는 것이었음. 확인하기 위해 서면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진행되어오던 것이고...감사는 계속 진행되어오던 것이었다고 함.

- 남양주 YMCA에 경인운하 백지화 수도권 공대위 참가여부를 경기도에서 사실 확인 전화를 했다고 함. 혹시 연락이 오면 어디서 연락이 오는지 정확히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차원에서는 공동대응이 어떠한가?

- 할 수 있는 건 성명서 정도인데, 기자들에게는 부각이 되지 않음. 전국단위에 공동대응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음. 만약 경기도에서 지급이 금지되면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관할이 중앙이기 때문에 전국단위에서 대응하는 것임.

☞ 시민단체연대회의 창원에서 공동 대응하기로 하였으며, 확인서 관련 건은 환경부, 여성부, 행안부 등 3개 단체에 관련된 시민단체가 많아 여연에서 자료 수집중이고 행정소송도 준비하고 있어 연대하기로 함.

(2)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 정당공천 배제 연대 참여의 건

- YMCA 전국 연맹에서 제안한 것임. 취지 및 목적은 정당 공천이 되면 패거리 정치, 당론이라

는 이유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흔들림. 정당공천 폐지에 동의하는 단체들이 내년선거에 정당공천 배제하자는 운동을 하고 있음. 전국적으로 연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의를 부탁받았음. 단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 우리의 입장을 결정해야 함.

- 지방에서 분권운동하던 쪽과 단체장, 의회, 지역단체들이 중심이 돼서 서명운동을 하고 있음. 경기도 내에 지방들, 시민단체 활동이 적는데, 시장측근들 아는 의원들도 진행하고 있음. 핵심은 정당 공천을 기초 지방자치제는 배제하자는 취지임. 내년 선거에 적용하려면 올해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YMCA연맹에서 시민단체연대회의에 제안한 것이고, 아직 수락한 것은 아님. 현실적으로 어렵고, 정당공천 배제가 아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야하는 것이 아닌가. 정당 표시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자는 의견도 있음.

- 구체적인 요청이 무엇인가?

- 참가단체에 넣고 서명도 하자는 것.

- 정당공천 배제 시 문제점도 이야기가 되고 있음. 한나라당이 평가가 안좋은데 이런 국면이 내년까지 간다면 한나라당을 다는 것이 낙선의 의미가 있는데, 정당공천 배제를 하면 한나라당이 당선되는 것 아닌가하는 것도 있고, 노영호 도의원의 경우 한나라당이 보호하는 것들의 문제도 정당공천의 문제이다. 이런 쟁점들이 있다. 지금 결정하기 어려운지...?

- 현실적으로 6월까지 법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임.

- 참여해서 구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의구심이 들고, 정당공천 배제가 핵심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음. 정당의 정치력을 발휘하고 당원을 움직이는 상황은 뻔하기 때문에 다른 지점을 잡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 현실적으로 활동이 쉽지 않을 것 같다.

- 여성연대 같은 경우는 운영위에서 논의 예정. 풀뿌리 민주주의 살려서 지자체를 살리려면 공천제를 배제해야 하는데, 여성계의 경우 여성의 진입장벽을 낮추려면 공천제를 배제하면 여성의 당선이 현격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낮고 소선거구제로 바뀌면 여성계에 타격이 됨. 당과 자치단체장이 같은 당이면 의회가 견제가 되지 않음. 모든 것이 공천제가 원인은 아니지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음. 그래서 판단이 잘 되지 않음.

- 요번 국회의원선거에서도 공천이 아니라 지명으로 간 것이고, 의원은 공천이라고 이야기될 수 없는 상황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자유로운 출마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서 좋은 의미일 수도 있음. 한나라당 쪽 당원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데, 그건 많을 듯하다.

- 단체가 결합하는 것은 거의 만장일치로 가자고 했는데, 615경기본부의 경우에는 동의하는 개별단체가 참가를 했는데...이 의미는 거의 동의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소속단체에 대한 영향을 답변으로 보내고, 답변이 돌아오면 메일로 오고, 개별단체 참가로 가는 것이 정리하겠다.

☛ 개별 단체가 단체의 입장으로 개별 참가하기로 함.

(3) 장자연 리스트 철저수사 촉구 연대 참여의 건

- 조선일보가 소송을 걸고 있고, 국회회의록에도 나와있고, 경찰청장의 발언에도 있고, 장자연씨 유언에는 9명이 있는데, 7명만 조사를 받았고, 나머지 2명은 조선일보, 스포츠 조선 사장임. 이번 주에 철저수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는데, 잘 되지 않으면 서명운동을 다시 해야 할 것 같고, 회원들에게 적극적인 서명을 받았으면 좋겠다. 연대 참여는 서명받는 정도이다. 다시한번 진행된다면 메일을 보내줄 것이고, 서명을 많이 받길 바란다.

(4) 경기희망교육연대 해소 혹은 유지의 건

- 1월 16일 전체 토론회를 통해서 경기희망교육연대 만들었고, 선정위원회 구성해 단일화 했고, 선거 결과 김상곤 교육감이 당선되었음. 이제 경기희망교육연대의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가 들어왔고, 해소와 유지 의견이 있음. 해소는 크게 할 일이 없다는 것이기에 단체가 필요없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내년 선거는 지자체는 정당과 연관되어 있어서 올해와는 다르다는 의견이다. 유지는 시민단체가 만들고 당선된 뒤 빠지는 것은 안된다. 지역일간지에서 문제제기도 하고, 취임식 때도 교육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앞으로 어려운 점들에 대한 지지세력으로 남아야 하고, 김상곤 후보가 약하거나 흔들리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지지격려뿐만 아니라 비판할 수 있는 단위, 소통의 창구가 필요하다는 것임. 안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으면 내년에 더 힘들어 질 수 있고, 이미 만들어진 좋은 모임을 해소할 필요가 없다는 것. 느슨한 형태로라도 유지하자는 의견임.

- 유지해야 한다. 내년도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교육관료들을 움직이고 기본적으로 교육감이 판단을 해서 가지만, 쉽지는 않다. 우리가 김상곤 교육감의 친위조직이 아니기에 교육운동을 하는 조직으로 유지하는 것이 옳다. 개별 단체가 그대로 남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에 관심이 큰 단위를 중심으로 남을 것 같다. 안으로부터의 개혁의지와 밖의 여론들이 뭉칠 때 성공되는 것이다. 형태나 참가조직은 변화되더라도 유지되어야 한다. 몇가지 성과는 내어주어야 민주개혁세력들이 당선을 시키고 내년 선거에 출마될 수도 있고 동반관계도 있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 내부에서 논의를 해봤는데, 강력히 유지하는 쪽으로 가야된다. 공약 중에 무상급식 등이 핵심인데, 그것이 실현이 되려면 예산심의의결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대부분 한나라당 세력들이다. 도저히 실현되기 힘든데, 실현되기 어려운 과정도 모니터링해야 하고, 지난 주에 반국가 척결위원회에서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 등 압박을 하는데, 자기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기도 못하는 상황에서 지지엄호해주어야 함. 한나라당 의원들이 압박을 할 때 지지세력으로 힘을 주어야 한다.

- 경기희망교육연대가 특정한 사람을 위해 구성된 것이라면 해소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전이 있는 건강한 교육을 만들기 위해 구성된 것이기에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고, 김상곤 교육감 개인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 목표 철학을 계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은 당연하다. 따라서 경기희망교육연대를 당연히 유지해야 한다.

- 경기희망교육연대가 진행과정에서 후보단일화 문제가 쟁점이었기에 충분히 정보가 공유되지 못했다. 공약을 선정하는 과정도 충분히 시민사회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했음. 정보와 상황이 공유되고 의견이 수렴되는 것으로 유지되어야 함. 명맥을 유지하는 식이라면 오히려 힘을 뺄 수 있음. 교육문제와 관련해서 전면적으로 나서기 힘들지만, 경기도 교육세력들이 시민단체들과 노조, 정치세력까지 포괄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수렴할 수 있는 단체로 가져가면 좋을 듯. 내년 선거 앞두고는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될 수 있다는 전제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 유지 쪽이긴 한데, 이름만 거는 김상곤 교육감을 배출한 단체로 남으면 안되고, 교육감 혼자 들어가 있는데, 지지해주고 실현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관료들이 없다. 후보운동하고 있을 때, 김상곤 교육감이 당선되어도 앞에서 추구를 요구하는 집회 등을 할 필요도 있지 않는가하는

이야기도 있었다. 의지가 필요하되 소통이 되고 의견수렴이 되는 연대체로 남아있는 것이면 남아 있어야 한다.

- 여성계에서도 논의했음. 마음은 같이 하지만, 활동역량에 한계가 있었고, 소통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조직체계를 잘 모르겠고, 조건부 유지에 동의는 하지만, 조직에 대한 그림이 어디에 집중되지 않고 다시 그려지면 좋겠고, 그 안에서 시민단체가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고, 선거 캠프가 아닌 교육운동의 거점이 되고, 참여 의미를 둘 수 있으면 좋겠다.

- 기획단 회의에 제안했던 것이, 지금 시스템의 회의는 해소하고, 카페를 만들어서 정보공유와 소통을 해야 하고, 카페 운영자를 많이 만들어서 김상곤 캠프에서 경기희망교육연대 유지를 물어보고,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왔고, 앞으로 계속 공유하고, 내년 선거에는 어떤 후보가 우리 후보가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고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통이 되어야 한다. 누구나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카페를 만들자는 제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 여러 부분에서 참여하는데, 여성계가 별도로 결합되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어머니회 등이 변화하는 것, 도서관 문제 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안들 우리끼리 논의할 수 있는 것, 인수위 과정에서 여성쪽이 신문에 공포된 사람 중에 한명도 없었다. 역시 정책결정과정에서 배제된 것은 문제였다. 시민단체를 담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계가 별도로 결합되길 바란다.

- 카페를 만들게 되면 다양한 분과별 모임들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 희망교육연대 참여와 관련해서 느슨하게 생각하는 듯하다. 철학과 목표로 당선된 김교육감이 적진에 혼자 있는 것이다. 김 교육감의 철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사람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해소는 절대 안된다. 김 교육감을 혼자 냅두고 우리가 지원한 철학, 목표를 방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와 같은 교육철학이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 오직 희망교육연대가 김교육감 만을 위한 조직이면 안된다. 김 교육감도 우리가 역시 견제해야 한다. 소통의 문제, 위원회를 하든 정책간담회를 하든 우리의 의견을 제안하고 평가해야 한다. 이것이 좀더 구체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

- 실질적으로 사무국 문제가 있다. 그것이 확정되지 않으면 유아무야될 수 있다. 조직고민을 심도있게 해야 할 것이다.

- 카페만을 위한 정보공유는 쉽지 않다. 유일한 장점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평준화 이야기했을 때 가장먼저 할 일은 시민단체들과 접촉하는 문제이다. 실제로 접촉해야 한다. 당선이후에 당선 축하모임을 진행한 것은 아는데, 지역 교육청별로 교육주체들과 시민단체들간의 간담회를 조직하는 것, 그 속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수렴하는 방법이 아니고는 힘들다. 조직해주고, 같이 논의하고, 끌어가는 정도의 교육희망연대가 아니면 있을 이유가 없다. 현실적으로 보면 전면에 나설 수 있는 교육단체들이 해주어야 한다.

- 참학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팬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유지는 반려되어야 한다. 유의미성, 소통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단위가 나서서 유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되는 듯하다.

- 전교조의 틀에만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책임주체이기도 하다. 학부모들 속에 파고들지 못한다. 학교 밖에서 학부모들과 모임을 만들어야지 뿌리내리고 지역기반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학교 밖으로 나오질 못하고 있다. 이것을 탈피하지 못하면, 힘들다.

- 전교조는 정식참가단체가 아니다.

- 기본적으로 궁금한 점은 유지성의 문제도 우리가 의견이 있다고 해도 유지가 되는가의 문제이고, 내년도 선거전선의 분위기는 올해와 다르다. 냉정하게 유지가능한 지 봐야 한다. 노골적으로 내년 선거를 봤을 때 전선이 갈라질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며, 교육주체로서 발

전가능성이 있는 가에 대해서 여기서 담보할 수 없다. 책임성을 담보하고, 가능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 한다. 그런 책임이 가능하다면 명분을 지지하고 지원할 수 있지만, 책임이 안되면 힘들다.

- 교육희망연대가 선거조직은 아니고, 일상적인 개입조직이라고 생각된다.
- 교육운동을 중심이 아닌 선거 중심이었다.
- 자기변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미가 있기에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 내일 전원회의에서 좀더 논의를 해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해소하자는 것은 아닐 듯하다.

☞ 5월 28일 11시 기획단 회의 후 오후 2시 기자회견을 통해 유지 발표하기로 했으나 현 정국상 기자회견은 연기하기로 함.

(5) 쌍용자동차 도민대책위원회 참여의 건

- 2600여명 정도 해고정리 할 예정이다. 노조에서 고통분담한다고 했으나, 정리해고 강행예정. 투쟁본부에 대한 두려움으로 참여못하는 단체들이 있기에 명칭을 도민 대책위로 가자는 제안. 내부적으로 정파적 갈등도 조금 있음. 범도민대책위는 진보연대에서 제안한 것임. 둘다 공통적인 것은 쌍용차의 정리해고가 심각한 문제이고,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결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투쟁으로 가겠다는 것이고, 범도민 대책위는 종교계, 시민단체 함께 하자는 것. 참여는 가능하지만, 매번 결합은 힘들 것이다.
- 활동계획은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는지?
- 경기도지사에게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구조조정을 막아야 한다고, 평택시와 경기도에게 압박하자는 것이다.

☞ 쌍용자동차 범 도민 대책위원회는 쌍용자동차 노조에서도 원하고 있어 각 단위(시민, 여성, 종교 등)를 연명하여 6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범 도민대책위원회 구성을 알린다.

(6) 경기도 시민단체 활동가 워크샵 - 연대 강화 방안

- 지난 2월 23일 회의에서 워크샵을 방관자적으로 치렀는데, 3개월 마다 한번씩 워크샵 준비위를 꾸려서 지역에서도 참여해서 지역에서 요구하는 안건으로 워크샵을 만들자는 의견이 나옴. 워크샵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음. 지역에서 과반수도 오지 않으면 워크샵을 통해 강화되는 것이 아닐 수 있음. 경기시민단체연대회의도 소통이 잘안되는데, 워크샵이 제대로 될 것인지 의문. 그래서 연대 강화방안을 먼저 이야기하고, 워크샵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다.
- 연대의 필요성인데, 지역조직들이 네트워크하는 데, 참여단체들이 요구하는 것이 연대를 정리하라는 것이다. 집중할 것에만 집중하자는 것이다. 워크샵을 이런 상황에서 할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지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폭 쉬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환경단체에서 활동가 워크샵을 하는데, 사람들이 뽑는 최고의 워크샵은 지리산가서 폭 쉰 것이었다. 뻘한 토론 또 하고, 계속 뻘뻘하게 일정이 있는 것은 힘들다.
- 활동가 워크샵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연대강화를 위한 방안을 주면 좋을 듯하다.
- 현 상황에서 쌍방향 소통은 힘들다. 경기시민단체연대회의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정보가 되었건 소스가 되었건 일방적인 제공이 앞으로 계속되어야 한다. 경기도 단위의 조

직이 계속 뭔가를 줄 수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계속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곳에 욕심부리지 말고.

- 그러기 위해선 홈페이지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자주 홈페이지에 들어오고, 정보도 확인하고 소통하기 바란다. 지금 나온 안은 워크샵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꼭 설 수 있는 것을 만들자는 것.

- 활동내용을 회의에서 말하면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게 된다. 내용을 챙겨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공유하고, 댓글도 달아서 읽을거리가 있다는 느낌이 들어야 한다. 결의를 적극적으로 모아 야 한다.

- 연대회의가 1년에 1회 워크샵을 하는데,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산, 용인, 안성이나 몇 개의 적극적인 단위만이라도, 전체가 하는 것은 힘들더라도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런 워크샵을 고민해야 한다.

- 1박 2일 워크샵을 했다가, 사람이 안오는 경우가 많았다. 꼭 쉬면 온다고 하는데, 오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다. 목표가 되는 것이 워크샵이 아니라, 경기시민단체연대회의의 연대를 높이는 분기별로 교류를 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되면 좋을 듯하다. 1박 2일 하는 것보다는 메리트가 있어보이는 강의든, 좀 특별한 자리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 하반기 정도에 교육감 스스로 와서 자신의 어려움과 앞으로의 계획을 강의로 잡고 경기지역 활동가들과 대표를 초청한다는 기획 등 도 좋다. 운하가 되고 있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만든다면. 분기에 1번 혹은 1년에 2번 정도로 모임을 잡아보자.

- 홈페이지 활성화, 기자들 리스트를 만들자고 하는데, 도 단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각 지역별로 메일과 단체와 관련한 소통 등. 경기도단위 각 지역단위가 메일링 리스트가 돼서 완성이 되면 좋을 듯. 워크샵, 연대강화 방안은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다음 모임을 3개월 뒤로 8월 쯤으로 잡아서 하나의 예로서 누구나 관심을 가지는 강연을 잡는 형태로 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분들에게 소식을 알리고, 단체들은 홈페이지에 정보를 올리는 것으로 하자.

☞ 8월 말(27일) 강연회 등을 개최한다.

4. 차기 회의 일정

- 분기별 전체회의 : 8월 27일(목) 오후 3시 장소는 추후 공지(1안은 시루봉, 변경시 별도 연락)
- 운영위 회의 : 6월 23일(화) 오후 3시

[별첨 1]

‘(가칭) 경제위기 고통전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범도민 대책위원회’

수신 : 경기지역 제 시민사회단체

4월 8일 쌍용자동차 법정관리인측은 2,646명 정리해고, 500여명 순환휴직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구조조정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쌍용차에서의 구조조정은 작년 12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지난 5개월 동안 비정규직노동자 340명이 강제희망퇴직, 업체폐업, 정리해고로 생존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이후 쌍용차의 희생가치를 인정한 조사보고서가 법원에 제출되었지만 사측은 5월 8일 강제희망 퇴직자를 제외한 2405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하겠다며 노동부에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해고란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는 생존권박탈, 사형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646명을 해고한다는 계획이 ‘경영정상화방안’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를 망가뜨린 주범은 2004년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의 쌍용차 해외매각반대투쟁을 외면하고 외자유치를 명목으로 쌍용차를 상하이자본에 헐값에 팔아넘긴 국가권력에 있습니다.

또 하나의 주범은 1조2천억 투자를 약속했지만 인수비용 외에는 한 푼도 투자하지 않고 신차기술, 커먼레일엔진, 하이브리드자동차 기술까지 빼간, 쌍용자동차의 지배주인 ‘떡튀자본’ 상하이자동차입니다. 상하이자동차에서 파견한 경영진은 기술유출과 함께 구조조정을 일삼아 2004년부터 지금까지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2000여명을 공장에서 쫓아냈습니다. 이렇게 2004년 상하이자동차에게 매각된 이후 쌍용자동차의 경영 상태는 날로 악화되는 과정을 거쳐 지금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지경이 되어도 책임지는 놈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쌍용자동차를 망가뜨린 주범들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시도조차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자본가, 부자, 투기꾼 살리기를 그만하고 노동자, 서민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정부는 경제위기가 도래하면서 자본과 투자자 살리기를 위하여 공적자금을 조성하고 투입해왔습니다. 정부는 국민 대다수가 그 필요성을 공감하지 못하는 4대강 하천정비사업에 4년간 18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작년 10월 21일 9조2천억원의 건설기업 살리기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올해 들어 부동산PF(project financing)로 인한 부실을 우려해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4조 7천억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입해주면서 기업 살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기에 눈이 멀어 위기에 빠진 은행들의 자금 조성을 위해 20조원 규모의 자금 투입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고 나선 바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투입하는 모든 자금은 노동자 민중의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투입되는 자금은 자본가, 부자, 투기꾼들 살리기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제 공적자금은 공황시기 노동자들의 고용대책과 민중들의 생존을 위한 기금으로 투입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망쳐놓은 쌍용자동차에 정부는 공적자금을 즉각 투입하여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쌍용차의 구조조정상황은 경제공황의 고통이 노동자, 민중들에게 전가되는 현재 한국사회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쌍용차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반대투쟁은 경제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민중에게 일방적으로 전가시키려는 것에 반대하는 한국의 노동자, 민중들의 요구를 담고 있는 중요한 투쟁인 것입니다.

이러하기에 쌍용자동차와 하청연관업체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하여 경기 지역 모든 민주, 진보, 양심세력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하는 ‘(가칭) 경제위기 고통전거,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범도민 대책위원회’ 를 구성할 것을 제안 드리며, 참여를 부탁드립니다.